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서

2023년 8월 1일 화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江原日報	03면	사고당협 면접 마친 국힘 ... 격전지 원주를 고심	1
강원도민일보	03면	도·도의회 워킹그룹 내달까지 3차 개정안 초안작성 돌입	2
江原日報	05면	어민 생계 위협하는 ‘민물가마우지’ 유해야생동물 지정... ..	3
江原日報	16면	화천 군사 규제로 2조2천억 손실	4
강원도민일보	22면	도내 첫 혼성 기동대 탄생 '여성인권 보호' 기대	4
江原日報	04면	‘모집 정원 초과’ 도내 농촌유학 인기	5
江原日報	01면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112년만에 원주 귀향	6
강원도민일보	04면	강원·경북 10개 시군 '양구~영천 남북9축 고속도' 조기건...	7
江原日報	10면	춘천 관광지·도심 달리는 '트램 9km 노선' 윤곽 나와	8
江原日報	11면	"정부 공공기관 2차 이전 기존 혁신도시 우선 배치"	9
강원도민일보	05면	고령 온열질환자 속출... 도전역 농업분야 '위험'	10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폭염, 일상적 사회재난 인식 필요	11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의료 공동화, 정부가 나서야	12
江原日報	19면	[사설] 치매 예방·치료 소홀하면 선진국가가 아니다	13
江原日報	19면	[사설] 강원특별법·평화경제특구법, 접경지 발전 기회로	14

江原日報

2023 08 01 ()

03

사고당협 면접 마친 국힘 ... 격전지 원주을 고심

일부당협 조직위원장 공석 유지 가능성

속보=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원주을’을 비롯해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사고당협위원회 조직위원장 선임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는 지난달 26~27일 이틀동안 면접심사를 진행, 이달 중 조직위원장 인선회의를 거쳐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원주을’의 경우 당협위원장 공모에 신규로 신청한 김기홍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과 최재민 도의원 등이 면접을 마쳤다. 앞서 지난해 이미 신청했던 6명의 후보군은 면접심사까지 종료한 상태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7월 중 최대한 빠르게 공석인 전국 사고당협을 정비한다고 밝히면서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됐으나 ‘신중 모드’로 전환됐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이번에 선임되는 당협 조직위원장은 공천 경선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해 지역내에선 ‘예비 공천장’을 받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어서다.

가장 큰 문제는 당내 분열 및 잡음 발생 가능성이다. ‘원주을’은 8명의 후보

자가 겨루고 있어 1명이 선발되면 나머지 후보군들의 이탈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원주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국회의원이 20대(2016년), 21대(2020년) 선거에서 당선되기 전 19대 새누리당 이강후, 17~18대 한나라당 이계진 전 의원(원주) 등 보수정당이 차지했던 곳이다. 그렇기에 국민의힘은 내년 선거에서 해당 지역의 탈환을 위해 당내 분열을 막는 동시에 인재를 내세우는데 신중을 가하는 모습이다.

이에 공석유지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사무총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원주을뿐만 아니라 다수의 당협위원회 조직위원장을 선임하는 것에 고민을 하고 있다”며 “당협위원장을 뽑아두면 마치 총선에 반드시 출마할 수 있는 것처럼 비칠 수 있고, 또 총선 인재를 영입한다면 갈등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러워했다. 이어 “이달 말께는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이하늘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 08 01 ()
03

도·도의회 워킹그룹 내달까지 3차 개정안 초안작성 돌입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마련을 위해 강원도내 실무자들이 ‘특례 추리기’에 나섰다. 목표는 오는 9월 내 3차 개정안 작성이다.

도는 지난 6월 특별자치도 출범 직후, ‘워킹그룹’을 구성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3차 개정안 초안 작성에 돌입했다. 워킹그룹은 △‘미래산업글로벌도시’ 목표구체화 △행정·재정·세제 △교육 등 3대 분야 총 12개 분과로 구성됐다. 각 분과 회의는 최근 1차 회의를 마쳤다.

워킹그룹에는 도 특별자치국직원을 비롯해 18개 시·군 특별자치도 특례담당자, 도의원,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도내 대학 교수 등 여러 실무진이 포진해있다. 다양한 그룹이 참여한만큼, 3차 개정안에 대한 기대도 크다. 박용식 도의회 사무처장은 “이전에는 도의원

들이 개정안 마련 이후에 관련 조항에 대해 보고를 받았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개정안 작성 과정에서 실무진과 함께 참여하는 점이 의미가 있다”고 했다.

본지 취재결과, 12개 분과 워킹그룹에서 논의된 특례만 200여가지를 상회한다. 도 관계자는 “단순 정책과제를 제외하고 법제화 과정을 거치면 최종 특례 건수는 이보다 줄어든 것”이라고 했다. 도는 오는 9월까지 3차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내년 6월 8일 시행되는 강원특별법 개정안의 ‘시행령’ 제·개정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현행 강원특별법 87개 조문 가운데 11개 조문은 시행령에 의해 적용된다. 도는 정부의 강원특별법 시행령 법령안 입안 시점에 맞춰 오는 10월 전까지 ‘강원도 맞춤형 시행령’ 초안을 마련해 정부 부처와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김덕형

어민 생계 위협하는 ‘민물가마우지’ 유해야생동물 지정... 포획 가능해져

텃새화되며 어족자원 고갈
환경부 시행규칙 개정 추진

속보=어족자원 고갈·백화 현상을 유발시키며 골칫거리(본보 3월24일자 등 보도)로 전락한 민물가마우지 문제 해결의 길이 열렸다. 환경부가 민물가마우지의 유해야생동물 지정에 나섰다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올 하반기 중으로 민물가마우지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기 위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면 지자체장의 허가로 포획이 가능해진다.

민물가마우지는 일부 개체가 텃새화되며 강원도 내에만 2만 마리 이상이 서식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가마우지 1개 무리(서식지별 500~2,000마리 가량)는 하루 350~2,000kg의 물고기를 먹어 치워 그간 내수면 어업인들의 피해가 막심했다. 또 배설물로 인해 나무가 말라죽는 백화현상까지 발생하는 등 생태계 악영향 우려도 제기됐다.

유해조수 지정 소식이 알려지자 내수면 어촌계 등은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희만 소양호

어촌계장은 “가마우지 때문에 수확량이 반토막 이상 나는 등 생태계가 위협됐는데 드디어 숨통이 트일 것 같다”며 “포획하는 데 적절한 보상까지 더해준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퇴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자치도와 도의회에서는 민물가마우지 퇴치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김용복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은 “배스나 블루길 등 생태계 교란종 퇴치를 위해 수매가를 정하는 등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만큼 가마우지도 유해조수로 지정되면 퇴치를 위해 관련 예산을 세우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원자치도 관계자는 “환경부 시행규칙 개정으로 세부 관리방안 등이 나오면 도에서도 민물가마우지 퇴치를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규호기자 leekh@kwnews.co.kr

2023 08 01 ()

16

江原日報

화천 군사 규제로 2조2천억 손실

전체 면적의 46% 군사보호구역... 재산권 행사 제한
자산손실가치 불어나 전향적 대책 촉구 목소리 커져

【화천】군사 규제로 인한 자산 손실 가치가 불어나면서 전향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화천군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역 내 군사 규제 면적은 421 km로 전체 면적의 46.3%에 달한다. 또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자산 손실 가치는 2조2,02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27사단 해체로 인구가 감소하며 상경기에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계속되는 군사 규제

재산권 행사에도 제한을 받으면서 전향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에 기대를 모았던 민군복합단지 조성, 미 활용 군용지 무상 양여 등의 특례 조항이 국방부와 협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여기에는 지자체장도 군사 보호구역 해제를 건의할 수 있지만 결국 국방부 승인사항으로 돼 있다. 그간 수없이 건의했지만 매년 군사작전을 이유

로 불가 통보를 받은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아 있다.

각종 규제로 인한 재산권 침해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외지로 유출되는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화천군의 인구는 올 6월말 현재 2만3,190명으로 국방개혁이 본격화 된 2019년 말에 비해 1,727명 줄었다.

사내면의 경우 27사단 자리에 15사단이 위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가지에 '점포세움', '상가임대'라는 플래카드와 표지판이 곳곳에 내걸리는 등 여전히 썰렁한 상태를 이어 가고

있다.

박대현 도의원은 “군사 규제 뿐만 아니라 산림, 환경, 농업 분야의 규제로 정작 내 땅에 들보 하나 세우는 것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형편”이라며 “필요한 특례를 지속적으로 발굴,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특별법에 대한 접경지역 주민의 기대가 자칫 희망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면서 “민군 상생정책 기조를 되살려 나가는 것은 물론 접경지역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변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장기영기자 kyjang3276@

강원도민일보

2023 08 01 ()

22

도내 첫 혼성 기동대 탄생 ‘여성인권 보호’ 기대

제1기동대 여성 경찰 5명 배치
사무실·휴게실·샤워장 정비
여성보호 강화·인파 관리 기여

강원도에서 남녀 경찰관으로 구성된 첫 혼성 기동대가 탄생했다.

강원경찰청(청장 김도형)은 원주 제1기동대에 여성 경찰관 5명이 배치됐다고 31일 밝혔다.

2021년 2월 창설돼 집회·시위 관리 등 치안을 유지해 온 제1기동대(원주)에 여성 경찰관 5명을 새롭게 받아 강원



강원경찰청은 2021년 2월에 창설돼 집회·시위 관리 등 치안 상황 유지해 온 제1기동대(원주)에 여성 경찰관 5명을 배치해 도내 최초로 혼성경찰관 기동대로 재편했다.

도내 최초로 혼성경찰관 기동대로 재편했다. 경찰청은 집회 시위 현장에서 질 서 유지 등을 맡는 기동대가 혼성으로 편성되면서 현장에서의 여성 인권 보호

를 기대하고 있다. 혼성 기동대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는 추세다.

새롭게 출발한 제1기동대는 혼성 기동대 재편을 위해 건물 1층에 사무실, 휴게실, 샤워장 등을 정비하고, 전입 경찰관 19명을 대상으로 환영식과 간담회를 가졌다. 강원경찰청은 현재 제1기동대를 비롯해 80여 명 규모의 3개 기동대를 운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남녀 경찰관 구분 없이 동일한 교육훈련과 현장 출동을 통해 여성 인권 보호와 인파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재훈 ericjh@kado.net

江原日報

2023 08 01 ()

04

‘모집 정원 초과’ 도내 농촌유학 인기

2학기부터 6개 초교서 진행

강원특별자치도 내 농촌유학 프로그램이 큰 관심을 끌면서 당초 모집 인원을 초과 달성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31일 강원농촌유학 신청을 최종 마감한 결과 50명 모집에 모두 53명의 서울시 초등학생 가정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영월이 34명으로 가장 많았고, 홍천 12명, 춘천 6명, 인제 1명이 뒤를 이었다.

농촌유학은 이달 중 최종 선정된 유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올 2학기부터 △영월(녹전초·옥동초) △홍천(삼생초·원당초) △춘천(송화초) △인제(용대초) 등 4개 지역 6개 초교에서 시범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농촌유학은 가족 전체 또는 일부가 이주해 지자체·마을에서 제공하는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가족체류형을 비롯해 학생이 학교 인근 농가에서 농가 부모의 보살핌을 받으며 생활하는 농가홈스테이형, 법인격을 갖춘 단체에서 활동가의 보살핌을 받으며 생활하는 유학센터형의 3가지 형태로 운영된다.

신경호 교육감은 “농촌유학은 교육을 이유로 강원을 찾아오게 하는 핵심이자 상징적 사업”이라며,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강원도의 생태환경교육과 특성화 교육과정을 경험하면서 배움의 힘을 키울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석기기자

2023 08 01 ()

江原日報

01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112년만에 원주 귀향

오늘 유적전시관 이전 ... 10일 오후 2시 환수식

고려시대 승탑의 백미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국보·이하 지광국사탑)’이 오랜 타향살이를 끝내고 112년 만에 고향인 원주로 돌아온다. ▶관련기사 22면

임진왜란 때 함경도 의병의 전승을 기념하기 위해 조성된 ‘북관대첩비(북한 국보 제193호)’를 우리 정부가 2005년 일본에서 환수한 후 이듬해 북한에 돌려보낸 적은 있지만 문화재보호법 규정을 따르는 국유 석조문화재가 국내에서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화재청과 원주시는 국립문화재연구원이 법천사지 유적전시관을 지광국사탑재 임시 보관처로 지정함에 따라 지광국사탑 일부 부재가 1일 이 전해 온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번에 먼저 고향으로 돌아오는 지광국사탑 부재는 총 33개 중 보존·복원이 완료된 31개다. 지붕돌인 옥개석과 몸돌인 탑신석의 보존·복원 작업은 아직 진행 중이다. 법천사지 유적전시관으로 이관된 지광국사탑 부재는 위치 결정이 있기 전까지 기획전시 공간에 상설 전시돼 일반인도 관람할 수 있다.

지광국사탑은 1085년 원주시 부론면 법천사지에 세워진 고려시대 국사 해린의 사리를 모신 승탑이다. 독특한 구조와 화려한 조각, 뛰어난

장엄장식으로 가장 개성 있고 화려한 승탑으로 평가받는다. 일제강점기인 1912년 일본으로 비밀리에 반출됐다가 우리나라로 되돌아온 최초의 국외 유출 환수문화재이기도 하다. 이후 고향인 원주를 떠나 10여 차례 떠돌이 생활을 하고 6·25전쟁 중에는 폭격을 받아 1만2,000조각으로 파괴되는 등 온갖 고난을 겪었다.

국립문화재연구원은 2016년 탑을 해체해 5년간 복원했다. 지광국사탑은 복원작업이 마무리되는 내년 말께 완전 환수될 예정으로 환수지는 법천사지 유물전시관과 본래 자리인 지광국사탑비 옆 등 2곳으로 압축된 상태다.

원주시는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의 환수를 기념해 10일 오후 2시 법천사지 유적전시관

에서 환수식을 한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비록 지광국사탑이 완전히 돌아오는 것은 아니지만 112년 만에 원주시민의 품으로 오게 된 만큼 보존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광국사탑이 원래 있던 원주 법천사지를 떠나 서울과 일본 오사카, 경복궁,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원 등 거처를 옮겨 다니다가 다시 원주로 돌아오는 여정은 직선 거리로 1,975km에 달한다고 문화재청은 밝혔다.

김설영·오석기기자



◇지난달 27일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원 관계자들이 문화재보존과학센터 석조복원실에 보관돼 있던 국보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부재를 옮기고 있다.

일제강점기 일본에 반출됐다 환수
탑 해체해 5년간 보존·복원 거쳐
부재 총 33개 중 작업 완료 ‘31개’
위치 결정 전까지 해체 상태 전시

강원도민일보

2023 08 01 ()

04

강원·경북 10개 시군 '양구~영천 남북9축 고속도' 조기건설 공동대응

추진협 창립총회 협약서 채택

초대회장에 최승준 정선군수

강원특별자치도와 경상북도 10개 시·군 지자체가 참여하는 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협회가 31일 창립총회를 갖고 고속도로 조기건설을 위해 공동대응에 나섰다.

양구군, 인제군, 홍천군, 평창군, 정선군, 영월군 등 강원특별자치도 6곳과 봉화군, 영양군, 청송군, 영천시 등 경북 4곳 등 10개 자치단체 시장·군수는 이날 정선 하이원그랜드호텔 컨벤션타워 컨벤션홀에서 10개 시·군 최대 현안사업인 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창립총회에서 초대회장은 최승준 정선군수, 차기 회장이 될 부회장은 박현국 봉화군수가 각각 선출됐다.

최승준 회장은 2024년 6월말까지 추진협회를 이끌어 나가게 된다. 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협회는 남북9축 고속도로 조기건설을 위해 10개 지자



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 창립총회가 31일 강원랜드 하이원 그랜드호텔 컨벤션홀에서 최승준 정선군수, 신영재 홍천군수, 최명서 영월군수, 박현국 봉화군수, 오도창 영양군수와 참여 시군 부시장·부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체가 공동 대응하는 내용의 '공동대응 협약서'를 채택했다. 남북9축 고속도로는 양구군~인제군~홍천군~평창군~정선군~영월군~경북 봉화군~영양군~청송군~영천시 등 10개 시·군 309.5km 구간을 잇는 대형 사업으로, 14조 8870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양구~영월 강원내륙 고속도로의 경우 지난 6월 3억원의 예산을 들여 국토교통부에서 현황조사 및 교

통수요예측, 경제성 분석 등 사전 타당성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강원내륙 고속도로 연결과 함께 경북 봉화~영천 고속도로가 연결되면 접경지와 폐광지역 등 낙후된 중부내륙권 교통인프라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최승준 회장은 "남북9축 고속도로 사업이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주현

江原日報

2023 08 01 ()
10

춘천 관광지·도심 달리는 ‘트램 9km 노선’ 윤곽 나와

시 최종요구안 道 제출
중앙로~거두리 등 연결
타당성 조사 통과 총력

속보=춘천지역 도심 곳곳을 연결하는 트램(본보 5월8일자 2면 보도) 노선의 윤곽이 구체화되고 있다.

초기에 퇴계동과 동내면 일대를 가로지르는 대체 교통 수단 개념의 노선 안이 논의됐으나 삼악산 호수케이블카, 소양강 스카이워크 등 관광지를 경유해 경제성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춘천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도시철도 도입 구상 및 경제성 검토 용역’ 최종 노선 요구안을 강원자치도에 제출했다. 도는 올 3월부터 강

원연구원을 통해 올 하반기까지 춘천, 원주, 강릉, 속초, 동해 도심에 트램(노면전차)을 건설하는 사업 연구를 진행 중이다.

시가 제출한 최종 노선 요구안은 삼악산 호수케이블카~중앙로~소양강 스카이워크~남춘천역~거두리를 연결하는 9km 구간이다. 동내면 고은리 행정복합타운은 도로 개설까지 시간이 걸림에 따라 2차 추가 연장 계획에 담기로 했다.

5월 공개된 최초 노선 계획은 1안이 삼악산 호수케이블카~KT&G 상상마당~춘천시외버스터미널 구간, 2안이 남춘천역~스무숲사거리~다원지구~고은리 행정복합타운으로 분리돼 있었다.

시는 도, 강원연구원과 협

의 결과 1, 2안 모두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기존 도심 구간에 관광지를 경유해 탑승객을 늘리는 노선을 고안했다.

트램은 1km당 건설비 2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가 계획한 9km 노선을 구축하려면 단순 계산으로도 1,800억원이 필요하고 차량 기지 설치 비용 등이 더해진다. 정부의 타당성 조사를 넘으면 국비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정거장 설치 등 세부 사업 계획이 나오지 않은 연구 용역 상태라 구체화된 소요 예산을 언급하기 어렵지만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다각도의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춘천=정운호기자 jyh89@

江原日報

2023 08 01 ()

11

“정부 공공기관 2차 이전 기존 혁신도시 우선 배치”

원주시 포함 전국혁신도시협 공동건의문 채택

【원주】원주시 등이 포함된 전국혁신도시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기존 혁신도시로 우선 배치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협의회는 최근 전북 완주군에서 협의회 정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국혁신도시협의회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원주를 비롯한 기존 혁신도시로 우선 배치하는 내용의 기본계획을 조속히 발표해 줄 것을 촉구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혁신도시 조성의 취지를 고려해 미완성 상태의 혁신도시 입지를 공고히 한 후 광역으로 과급력을 높여야 한다는 게 협의회 소속 자치단체의 공통된 목소리다.

협의회는 또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국비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완화 요구를 건의문에 담았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

법 개정과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토지공급지침 개정 등을 건의했다. 혁신도시 재정 확대를 위한 재정특례 등 관련 법 개정도 촉구했다.

전국 9개 광역자치단체 소속 11개 시·군·구가 참여해 6개항으로 채택한 건의문은 정부와 관계기관 등에 전달된다.

김태훈 원주부시장은 “혁신도시의 성공적 안착과 혁신기능 수행을 위해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은 기존 혁신도시로 우선 배치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협의회 회원도시들과 힘을 모아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남윤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 08 01 ()
05

고령 온열질환자 속출...도전역 농업분야 '위험'

지난 한달 새 환자 45명 발생

강릉서 9일 연속 열대야 기록

무더운 날씨 속 강원도내 고령자가 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한반도의 찜통더위가 내달 초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지자체도 긴급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3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5월 20일부터 확인된 강원도내 온열질환 환자는 총 55명이다. 그 중 81.8%에 달하는 45명이 7월에 발생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이 집계하는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의 경우 응급실의 표본감시 결과로 전수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무더운 날씨 속 집계되지 않은 온열질환 추정 사례도 속출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30일 낮 12시 26분쯤 원주시 신림면의 한 공원에서 90대 남성이 무더운 날씨에 쓰러졌다. 앞선 오전 10시 33분쯤 춘천시 후평

동에서 70대 남성이 쓰러진 채 발견, 주변인들의 신고로 구급대원에게 안전조치를 받았다. 당시 해당 남성의 체온은 39도에 육박했으며 무더운 날씨에 다리에 힘이 풀려 쓰러졌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9일 오후 5시 2분쯤 춘천시 사북면의 한 밭에서 80대 남성이 쓰러졌다.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는 해당 남성의 체온과 산소포화도를 확인한 결과 각각 40.7도, 66%로 긴급한 상황으로 확인돼 병원으로 이송했다. 강원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오르는 곳이 많을 것으로 나타났다. 더

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강원도내 전 지역의 농업분야 위험수준은 최고 단계인 '위험'을 보이는 상태로 야외 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북부 산지와 속초·양구·고성·양양은 '경고' 단계를 보이겠다. 강릉의 경우 9일 연속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다. 강릉 열대야 최장 연속기간은 지난 2013년 8월이다. 당시 강릉은 3일부터 18일까지 총 16일 간의 열대야가 이어졌다. 더불어 현재 동해, 영월, 평창, 횡성, 태백에는 폭염주의보가, 이를 제외한 도내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다. 무더위는 1일에도 이어지겠다. 1일 도내 아침 최저기온은 영서 22~25도, 영동 24~26도, 낮 최고기온은 영서 34~36도, 영동 31~35도로 예보됐다. 신재훈

강원도민일보

2023 08 01 ()
/ 19

폭염, 일상적 사회재난 인식 필요

-개인 문제 아닌 중장기 공공대책 적극적이어야

8월 1일 오늘도 최고체감온도 35도를 오르내리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어제 춘천, 원주, 강릉 평지 등 도내 웬만한 곳에 폭염경보가 발효된 데 이은 것으로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강릉은 7월 22일부터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는 등 밤사이 최저 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 현상이 삼척 동해 양양 원주 등지에서 나타났습니다. 고원 도시 태백에도 폭염주의보가 나왔습니다. 국지적으로 소나기가 내리긴 했으나 찜통더위를 식히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기온이 오르면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초기 증상을 시작으로 열경련, 열탈진, 열실신, 열사병 등 온열질환을 부릅니다. 심혈관 등 기저질환을 악화하고 의식을 잃는 응급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11년 온열질환자 수는 443명이던 것이 2018년에는 4526명으로 10배 이상 뛰었습니다. 사망자는 6명에서 48명으로 급증했습니다. 폭염을 단순한 기상이변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경각심을 갖고 선제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그런데 개인 차원의 주의 문제로 떠넘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 섭취와 실외작업에서의 그늘과 휴식 확보 등 안전수칙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실내외를 가리지 않고 노동 특성상 회피하기

어려운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제 폭염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일상을 위협하는 사회적 위험요인이자 재난으로 인식하는 더 적극적인 대책이나 와야 합니다. 당장 올해만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폭염 피해를 낮추는 대응책을 발굴해야 합니다.

첫째 대표적인 폭염대책 중 하나인 무더위쉼터 입지와 이용현황을 분석해 최대치로 효율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늘막 설치와 물안개분사장치, 폭포와 같은 폭염피해 저감시설의 투입 예산 대비 효과를 세심히 따져 운용해야 합니다. 둘째 경제적인 능력이나 연령 등에 따라 폭염 대응능력은 차이가 큼니다.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은 그 위험을 알고 있더라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건강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해 공공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폭염 피해 증가를 고려한다면 취약계층에 대한 근본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셋째 극한 기후현상인 폭염은 인명피해를 비롯해 농작물 손실과 축산물 피해, 에너지 고갈, 경제적 손실 등 다양한 문제를 부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지적인 폭염 추세에 따른 보건 및 경제적 파장을 세밀하게 분석해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 08 01 ()
/ 19

의료 공동화, 정부가 나서야

-의사·간호사 이어 약사까지 퇴사, 자체 해결 한계

의사와간호사등 의료인력 유출에 이어 약사까지 속속 퇴사해, 공공의료 공백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지역 의료 시스템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입니다. 이렇다가 허약해진 의료 체계가 붕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 공백은 지역 공동화를 촉발하는 요인입니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주민들도 대도시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와 지자체가 대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공공의료기관과 지역 사회의 노력만으로 상황을 해결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중요합니다.

의료진의 타지 유출은 심각합니다. 영서권 유일의 상급종합병원인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의 경우 최근 3년간 의사와간호사 등 의료인력 총 610명이 퇴사했습니다. 전문의의 경우 2020년 56명, 2021년 56명, 2022년 60명 퇴사했고, 정규직 간호사는 2020년 131명, 2021년 154명, 2022년 153명이 병원을 떠났습니다. 한림대춘천성심병원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간호사 74명과 전문의 13명이 퇴사했습니다. 강원대병원은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문의만 모두 51명이 이탈했습니다.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약사들의 퇴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약사들은 약 처방 및 제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력입니다. 최근 강원대병원의 경우 4명의 약사가 퇴사 의사를 밝히며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초 강원대병원의 경우 17명 약무직 정원 중 이미 5명이 미달된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4명의 약사가 퇴사하면서 처방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원주의료원도 올해 초부터 약사 2명의 대한 채용 공고를 올렸지만 지난 19일에서야 겨우 1명이 충원됐습니다.

의료 현장 관계자들의 전망은 비관적입니다. 약무직 부족 문제에 대해, 현장에서는 의료기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 의료기관의 경우 약국을 개원하는 것만큼의 보수를 맞춰 주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약무직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의료진 이탈 현상은 공공의료기관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 의료 시스템이 차질을 빚을 정도입니다. 이제는 일선 의료기관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의료진 이탈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함께, 정책 우선순위로 삼아 정상화 대책을 서둘러야 합니다.

江原日報

2023 08 01 ()

/ 19

치매 예방·치료 소홀하면 선진국가가 아니다

치매는 노인에게 가장 두려운 병(病)이다. 암보다 더 무섭다고 한다. 노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병이다. 게다가 본인과 가족은 물론 주위 사람들에게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주기까지 한다.

실종자 대부분이 치매 환자다.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실종 사건은 2021년 2,271건에서 2022년 3,712건으로 늘었고, 올 상반기에만 1,366건이었다. 실종자를 빨리 찾아 사건화되기 전에 종료된 ‘신고 사건’까지 포함하면 올 상반기 1만여건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원주경찰서가 3,000여건, 춘천경찰서는 2,000건 정도이기 때문이다. 실종자 유형별에서 ‘치매 환자’ 급증세는 심각하다. 지난해 403건으로 전년 대비 91% 증가했다. 고령화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다. 지난해 춘천에서는 80대 여성 치매 환자가 이틀 만에 고은리 야산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치매를 ‘몰라서 두려운 병’이라고 말한다. 현대 의학의 발전으로 치매는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니다. 아직 충분하진 않지만 치매도 예방하고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환자가 치매의 초기 증상을 나이 들어 생기는 병으로 무심코 넘긴다. 치매를 불치병으로 생각하고 치료를 포기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제부터라

도 치매가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치료하면 관리가 가능한 병이라는 사실을 국민에게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국민이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와 환경을 개선하는 일도 국가의 책무다.

정부는 2017년에 ‘치매 국가책임제’를 선언했다. ‘치매안심센터 설립’을 내세워 치매 환자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치매 환자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가 미흡한 실정이다. 세밀한 운영 계획 없이 무리하게 추진되다 보니 현장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치매 환자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요양보호사도 부족하고 이들에 대한 대우도 열악하다. 도심과 농촌 지역 간 심각한 인프라 격차도 최우선적으로 해소해야 할 과제다. 지역에 맞는 적절한 개선안이 필요하다.

현재 치매 정책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치매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대책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기반시설 구축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경증 치매 환자는 방치되다시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치매 환자 급증에 따른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치매 환자의 가정과 개인적인 문제까지 모두 해결해 줄 수는 없을 지라도 확실한 치매보호체계만큼은 꼭 갖춰야 한다.

江原日報

2023 08 01 ()

/ 19

강원특별법·평화경제특구법, 접경지 발전 기회로

‘2023 접경지역 발전전략 포럼’이 7월31일 국회에서 열렸다. 2019년 이후 다섯 번째로 개최된 이날 포럼은 신범철 국방부 차관,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의 한반도 정세 및 접경지역 발전전략에 대한 기조연설에 이어 김범수 강원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의 ‘접경지역 평화경제특구 의미와 과제’ 주제발표로 진행됐다. 강원특별자치도 면적의 28.5%를 차지하는 접경지역은 각종 규제로 인구와 산업 위기가 심화됐고 지역경제가 침체됐다. 하지만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 평화경제특구법이 통과하면

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다. 강원일보와 강원자치도,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한기호·이양수 국회의원실

등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번 포럼을 개최한 이유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지역 발전을 가로막아온 농지·국방·산림·환경 등 4대 핵심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특히 각종 군사 규제를 적용받는 접경지역을 살리기 위한 과감한 국방 규제 혁파 조항이 마련됐다.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군 급식 수의계약을 유지하는 조항이 명시됐고, 도지사나 관할 시장·군수가 미활용 군 용지를 활용하려는 경우 국방부 장관이 이를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도지사나 시장·군수가 민간인통제선이나 보호구역 지정 변경 또는 해제를 건의할 수도 있다. 사실상 접경지역 산업 육성을 위한 원동력을 확보하게 됐다는 의미다.

강원일보·도·6개 시·군 7월31일 포럼 개최

유사한 특성 기반 공동 발전 도모 필요해

정책 개발·실현도 함께 발맞춰 나가야

평화경제특구는 접경지역 중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와 상호 보완성을 증대하고 남북경제공동체 지향에 맞는 곳을 지정하는 제도다. 통일부 장관이 주도해 평화경제특별구역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시·도지사는 통일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발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이 이뤄진다. 다만 현재 경색된 남북관계로 아직 평화경제특구의 이점이 확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각종 지원과 혜택

속에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지정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대응해 지역발전의 활력으로 삼아야 될 가치는 충분하다.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지자체들이 똘똘

뭉쳐야 한다. 경쟁적인 개발보다는 유사한 특성을 바탕으로 한 상호보완적 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통합 정체성을 확보, 통합 이미지를 구축하고 브랜드화해야 한다. 안보관광은 군사 중심적인 전통적 개념에서 나아가 경제·사회·환경·과학기술 등 비군사 요소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콘텐츠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야 한다. ‘생태체험형’, ‘레저스포츠형’, 지역문화나 타 산업과 연계하는 ‘연계 활용형’이나 ‘융복합형’으로 접경지역 관광을 고도화해야 한다. 평화경제특구는 중앙정부 차원의 특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이번 포럼에서 도내 접경지 6개 시·군은 지역 정책 개발에 공감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함께 하나씩 실현해 나가는 것이다.